

【헌 법 25문】

【문 1】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② 헌법상 대법원회의에 부여된 권한은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대법원규칙제정의 의결권이다.
-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 2】 대통령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현행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 ②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④ 국군의 조직과 편성

【문 3】 현행 헌법의 전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는 물론 정책결정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 ② 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으로서 구체적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성을 가진다.
- ③ 헌법전문은 일반적으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운동의 정신은 헌법의 연혁적 기초에 불과하여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외에 대한민국의 지도이념과 지도원리도 규정되어 있다.

【문 4】 다음 중 헌법에 의한 평등권 제한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취업기회보장
- ②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④ 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문 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 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이란 사인(私人)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법리와 관련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도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로써 하위기본권의 제한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채택을 부정하고 있다.
- ③ 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 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다.
- ④ 행정작용 중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관리행위(管理行爲)나 국고행위(國庫行爲)에도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문 6】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 ①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제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행정질서벌 부과 후 형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7】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④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문 8】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도중에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다라도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위헌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공기관, 일반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④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문 9】 역대 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 ②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③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독과점의 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농지임대차의 허용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존 경제질서에 대하여 폭넓은 수정을 가하였다.
- ④ 1987년의 헌법에서는 소득의 적절한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다.

【문 10】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 ①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하는 것
- ②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
- ③ 공직선거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
- ④ 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문11】 다음 중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국회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한한다.
- ② 제5공화국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결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해임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 ③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는, 탄핵소추에 의한 통제, 해임 건의에 의한 통제, 계엄의 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의 사후승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갖는다.

【문12】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 3권(노동 3권)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 ① 근로 3권(노동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 사무노동자를 포함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 ② 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노동 3권)이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 면책은 되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3권(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13】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현행 제6공화국헌법 외에 제2공화국헌법에도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다.
- ②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하여 어느 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 ④ 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4】 우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도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모든 국민은 능력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등법원은 헌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법원은 아니다.
-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③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이루어진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 ④ 법관의 임기가 10년이라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문16】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은 그 차별적 취침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은 평등에 반한다.
- ③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한 것은 종교단체의 능력에 따라 설립상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문17】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③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정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문18】 다음은 현행 헌법의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현행 헌법은 총강에서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②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중 헌법제정의 취지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 내지 근본사상 등을 명시한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 ③ 부칙은 헌법의 효력발생일, 헌법기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④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시되고 있다.

【문19】 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 ②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현행 형사보상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 ④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해당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 ③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④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며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문21】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 ④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문22】 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②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인정하여 탄핵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 ③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문2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구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 ②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벌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 ③ 벌칙규정의 하위 법규 등에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법(母法)이 처벌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형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 ④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는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문24】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못된 내용은?

- ①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 ②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본다.
- ④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 (나)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라)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마)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 ① (가), (나)
- ② (가), (마)
- ③ (가), (나), (라)
- ④ (나), (라), (마)